

**Vol. 05**

2024.05. 21.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월별 성실납세 신고 제도의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3) 시행일  
'25.04.01.

## I. 법령 개정사항

### 2. 「전파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벌칙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과태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500만원 이하)

#### (3) 시행일

'25.04.23.

I. 법령 개정사항

3.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송 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다음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국은 제외한다. 가. 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별표28] 과태료 부과 기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조·수입·판매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 외	경고	30만원	50만원

(3) 시행일

'25.04.23.

## I. 법령 개정사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1) 개정 이유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사후에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개정 취지 반영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사후에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 시 수출용 사용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완화
	기존 제출 서류(수출신고서,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을 추가하고, 5종 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하도록 서류 요건 완화
수출유형별 수출 사실 확인서류 구 체화 (별표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 및 제3조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계기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 2)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요건 명확화 3)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의 효력을 적용받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명확화 4)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의 환급수출형태부호 명확화 (별표2)

## (3) 시행일

'25.04.25.

## II. 입안예고

### 1.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1) 입안 이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 통합
- 품목분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오류 수정 등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b>현행</b>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고시 (총 14조)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총 13조)
	↓
	<b>통합 개정 후</b>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총 24조)
	“폐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개정 (고시 2조)	분류원장이 외국어로 작성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출자료의 한글 번역 자료 제출 여부 판단 -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아닌 “분류원장”이 번역자료 제출 필요 여부 판단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등(고시 6조)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서면의결 가능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근거한 위원회 서면의결로 효율적·탄력적인 위원회 운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고시 7조)	기술자문위원 위촉의 근거규정(영 제100조제8항) 삽입
위원회 심의 (고시 10조)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 명확화 - 분류원 접수·심사·보고,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상정 여부 판단 등
협의회의 심의 (고시 1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같이, 품목분류협의회도 “진술인 참석 및 의견진술” 가능

처리기간 (고시 14조)	품목분류 사전심사(또는 재심사) 처리기간 산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고시 13조)	고시에 포함된 행정규칙 제명 현행화*
품목분류의 고시 (고시 16조)	영업비밀 등 사유로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요청서와 증빙자료 등 함께 제출 - 품목분류 결정 공개율 제고로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경영·영업상 비밀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품목번호 결정 비공개

### (3) 시행 일자

'25년 중 시행 예정



### Ⅲ. 조세심판사례

##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2.28.부터 2023.2.8.까지 이탈리아 소재 A 등 18 개 업체(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166 건으로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3.6.19.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당초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에 대해 발행한 송품장(Invoice, 이하 “당초 송품장”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한-EU FTA 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문안·인증수출자번호·수출자의 인장 및 서명 등(이하 “쟁점원산지문구등”이라 한다)을 삽입하거나, 당초 송품장에 기재된 “No EU Preferential Origin” 문구(이하 “쟁점비특혜문구”라 한다)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3.11.27. 및 2024.12.11.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13%)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 개별소비세 000 원, 교육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처분청의 압수수색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의 절차와 예시등이 기재된 내부문서를 확인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 중 위·변조 항목과 방법 등을 특정된 것은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는 위·변조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할 필요 있음

### (3) 결정일

2025.03.25. (조심 2024 관 0041)

## Ⅲ. 조세심판사례

##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10.4.부터 2020.7.27.까지 싱가포르 소재 A(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21 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 142 조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 및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잠정가격신고 사유(항목)는 ‘실제지급금액’ 및 ‘도착항 열량 수량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 결정’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각 확정가격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21년 2월부터 열량(MMBtu, Mertric Million British thermal unit)은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대상(사유)이 아니라고 구두로 안내함에 따라, 2021.9.14.부터 2021.10.26.까지 쟁점물품의 열량(MMBtu)을 하역 후 물량으로 정정하고, 물량의 증가에 따른 관세 000 원 개별소비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2024.9.13., 2024.9.20. 및 2024.9.23. 처분청에 위 가산세 000 원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8.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열량을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대로 잠정가격 적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신고 시까지 열량을 정정하면 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임

### (3) 결정일

2025.04.09. (조심 2024 관 0165)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 설명회 개최

- 제도 인식 제고 및 AI 반도체 등 불법·우회 수출 단속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수)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관세청, 무역안보관리원,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 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26억 달러...역대 최대

- 수출액이 가장 컸던 '24.1분기 보다 13.0% 증가...수출국 1위 중국, 미국이 바짝 뒤쫓아
- K뷰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1분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 13.0% 증가한 26억 달러(잠정)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한 2021년 1분기 수출액 22억 달러보다 18.2%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월별로 보면 1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휴일로 전년 동기보다 5.6% 감소한 7.5억 달러이고, 2월, 3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7%, 24.4% 증가한 8.9억 달러,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 &lt;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1위, 미국이 바짝 뒤쫓아 &gt;

'25년 1분기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5.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20.0%)로 가장 많았고 미국 4.4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6.9%), 일본 2.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4%)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5년 1분기에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기보다 0.9억 달러(-15.3%) 감소하면서, 1분기 對 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20%대를 기록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0.6억 달러(+14.2%) 증가하면서 '25년 1분기 수출액의 16.9%를 차지하였고, 일본은 0.3억 달러(+11.9%) 증가하여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모두 10% 이상 증가하였다.

참고로 2024년 미국 내 화장품 수입액은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으며, 일본 내 화장품 수입액도 우리나라가 1위, 프랑스가 2위를 기록했다.

## &lt;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인체세정용품 증가폭이 가장 커 &gt;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19.5억 달러(+2.5억 달러, +14.6%), 색조 화장품 3.6억 달러(+0.5억 달러, +15.6%), 인체세정용품 1.2억 달러(+0.2억 달러, +21.7%) 순으로, 인체세정용품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0.6억 달러(4.6억 달러→4.0억 달러, -12.9%)로 감소액이 가장 컸고, 색조화장용 제품류 0.3억 달러(0.8억 달러→0.5억 달러, -30.7%) 감소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5억 달러(2.7억 달러→3.2억 달러, +17.1%), 인체세정용 제품류 0.1억 달러(0.2억 달러→0.3억 달러, +42.9%)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1억 달러(1.4억 달러→1.5억 달러, +8.4%),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2억 달러(0.7억 달러→0.9억 달러, +34.6%)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 < 우리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해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화장품 분야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s://helpcosmetic.or.kr>)\*'도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 등 새로운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규제조화 차원의 안전성 평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여 국내 화장품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국가와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우리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한-말련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

-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무역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활력 제고 기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유망 시장과의 양자 FTA를 통한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8차 공식협상이 4.8(화)~11(금) 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Sumathi Balakrishnan)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70여 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연이은 네 차례 공식협상('24.8월 4차, 10월 5차, '25.1월 6차, 2월 7차)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면서 협정문 전반에 걸쳐 폭넓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이번 공식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0개 분야에서 밀도있는 협상을 통해 양국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2개월 연속 대중국 수출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여건 개선과 불확실성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아세안 유망 시장인 말레이시아와의 조속한 양자 FTA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미(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
-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12월) 및 지원비율 확대
-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말까지 연장
-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정부는 4.9일(수)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①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와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 ② 수요진작, 신시장 출동 등 시장충격 대응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펼친다.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 ③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25.上)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25.3분기)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 ④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5.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첨단장비로 새롭게 출발

-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관 서비스 제공할 것

관세청은 3월 15일(토, 09:00) 2년여('23.5~'25.5)에 걸친 「관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 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 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약 등 위해물품 선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첨단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관세행정에서의 첨단기술 활용가능성을 확대하였다.

관세청은 성공적인 유니패스 개통을 통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되고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입신고서 자동처리 속도는 2.5배\*, 수출신고서 처리 속도는 1.8배, 환급신청서 처리 속도는 1.6배 빨라졌으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동시처리 능력이 3배 증가\*\*하면서 화물통관진행정보 등 관세청이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분석 성능도 2.7배 개선\*되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결합 및 추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밀수, 불법 무역, 관세 포탈 등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모든 시스템 기능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개통 2주 전부터는 24시간 상시대응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규모의 시스템 전환 사업임에도 큰 장애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개통을 마무리하였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도 관세청은 시스템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즉각 대응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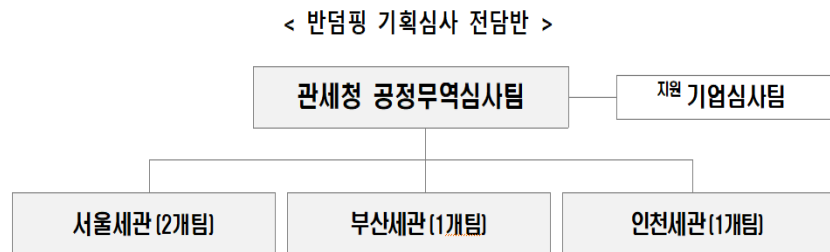
고광효 관세청장은 유니패스의 성공적인 개통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더욱 공고해 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니패스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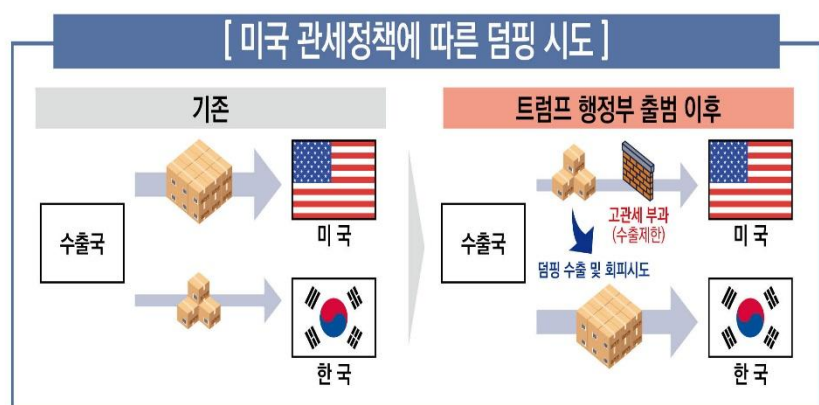
## 6.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는다...4월 14일부터 100일간 특별 점검 실시

- '25.4.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 제조국·공급자 세탁, 저가신고 등 반덤핑 조치 회피 유형별 기획심사 실시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늘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美)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적발 사례>

**【중국산 H형강, 104억 원】** A사는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 원(덤핑방지관세율 28.23%)을 포탈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2.7억 원】** B사는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율 15.39%) 부과대상인 물품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세번으로 수입신고 하려다 적발되었으며, 관세청은 관세 등 약 2.7억 원을 추징



**【베트남산 합판, 2억 원】** C사는 덤핑방지관세(10.54%) 부과 회피를 위해 베트남산 합판(4412.31-7090호)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제품(4421.99-9000호)으로 신고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하다가 적발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7.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 5월 19일(서울), 20일(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전화 : 042-714-7538)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하였다.

이러한 기업지원의 연장선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5월 20일(부산) 양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8.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월 18일(금) 붙임과 같이 공개하였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4월 3일 시행)와 자동차 부품(5월 3일 시행예정)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와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연계표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운영 등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미 관세부와 자동차·자동차부품 한-미 관세율표 연계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9. 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덤핑방지관세 11.37~18.81% 부과 건의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15.15~33.97%,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도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4월 24일(목)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무역위원회는 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②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③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④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⑤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하고, ⑥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하여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동 제품에 대해 '23.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2~36.98%, '23.5 ~ '28.5월)하였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1년 대비 '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되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강웨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4.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0. “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 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 한국무역협회(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배포

관세청은 4.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와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하였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다.

배포된 자료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하며,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1.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 번호 연계표 공개**

- 반도체, 의약품 등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 번호 연계표를 5월 19일(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자동차 및 부품(4.18.)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미 상호관세 예외 품목 한-미 품목분류 연계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2.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민관합동,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하였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였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하여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하였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3. 산업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 실시

- 다음주 6개 분야에 대한 제2차 기술협의 개최에 합의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호혜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지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5.16(금) 16:30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 5.1일에 개최된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 국장급) 경과 점검 및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을 위한 협의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주(5.19일주)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대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측과 상호호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